

“인격 갖춘 회장 선출해야”

문승우 도의원, 민간체육회장 선거 공정 관리 촉구

전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회, 군산14)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 및 14개 시군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승우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등에 따라 2020년부터 실시될 도 및 14개 시군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칫한편으로 많은 인물이 나서고 있는데 현 지치단체장의 측근 또는 반대편 진영의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 체육단체의 선거비용 차단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장 선출방식이 300여명의 대

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자칫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옹립할 수 있다며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 전북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지사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과거 몇몇 단체장들이 체육단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전북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능력과 인격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단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적극 활용해야”

김중식 도의원, 대안 마련 촉구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전북도가 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나아가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중식(군산2) 의원은 24일 제36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조선소 부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지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재가동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과 도



내 경제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2017년 86곳에 달했던 협력업체는 현재 20곳도 남지 않았고, 노동자마저 5천 250명에서 300여 명밖에 남지 않고 있어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은 업체들마저도 일감이 끊겼고, 앞선 데 달린 격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나라로 떨어진 상황이다. 김중식 의원은 “최근 군산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만들었지만 이미지도 효과가 미미해 지역주민들의 한숨을 보다들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군산이 살아나고 도 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답”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재가동을

수없이 외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의 공약과 국무총리의 약속이 있었고, 현대중공업도 조선 경기와 수주상황이 좋아지면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현재 그 어떤 약속과 말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조선시황이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약 22% 상승하고 현대중공업의 수주 상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김중식 의원은 “국가산단의 거대한 부지가 3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국가적으로도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이라면서 “도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공정차별 해당부지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군산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라면서 “군산조선소 부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200만 도민 경기침체 견딜 방파제 역할해야”

김기영 도의원, 예산지출개선 촉구

전북도의회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13)의원이 24일 제3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적극적인 예산지출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일반회계 기준 1,663억이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돼있어 실제 쓰이지 않는 돈이며, 2015년 이후 연



간 1억 이상 불용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의 수가 매해 평균 20건·1,580억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편성하는 예비비 관련해 최근 5년

평균 분예산에 편성한 금액의 12% 정도만 쓰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 연간 평균 700억가량을 추가 편성하고 있고 결국 연간 평균 1,100억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돼 순세게임여금으로 다음연도 회계로 넘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저축은 더는 의미가 아니다”며 “도가 적극적 예산지출을 통해 200만 도민에게서 경기침체라는 큰 폭풍우를 견딜 단단한 방파제가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이 24일 전북도 기록원 건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용한 가치 보전해 후대에 전달 적극 나서야”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 기록원 건립 위한 세미나 개최 기록물 관련 기획·조정·관리 콘트론타워 필요성 환기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24일 전북도 기록원 건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객관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김형국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장, 홍성덕 전주대 교수, 김용만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장과 관계 공무원, 도내 문화인 대표, 관련 학과 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객관홍 위원장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및 지방기록의 실태와 기록자치의 실현 및 지방정부의 설명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삼 원장은 서울기록원 건립과정을 바탕으로 전북도 기록원 설치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먼저 기관의 사명과 비전, 목표와 과제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도민 및 의사결정 집단에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덕 교수는 전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이 다소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록물의 범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대표 도서관, 시군 기록관 및 아카이브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국 과장은 국가기록원과 시도기록원간의 역할 분담 방향, 국가기록원 차원의 시도기록원 설립에 필요 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김용만 국장은 전라북도 관련 기록물 수집공모전 및 전시회, 국비지원 요청 내용과 2020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개최한 홍성임 의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광역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영구기록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기초단체·교육청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과 그밖에 지역에 관련된 향토자료 등 민간 기록물을 보전·보관하는 기관으로 단순 보관장소가 아닌, 유용한 가치를 가진 지역사회의 역사를 기록물의 형태로 보전해 후대에 전달하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 문제로 전국에 단 2곳뿐이어서 그 기록물 관리에 대한 기획·조정·관리의 콘트론타워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이병철 도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화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이병철(전주 제5선거구) 의원은 24일 제367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는 물론 지역인재들의 취업 응시기회 확대, 공공기관의 우수인재 채용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6개 권역(강원권, 제주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권역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혁신도시 기관 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소수채용[年 5명이하],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분부 또는 지사채용 등)을 삭제 또는 완화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채용 범위를 권역화하고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이 삭제·완화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의회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